

2024년 청년·대학(원)생 법·정치·선거, 의식조사 발표

조국과 민족의 희망인 청년대학생들의 세상보는 눈 - 공동체의식

< 총2,901명, 평균연령 23.24세 --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1.82% >

- 지난 4.10 총선은 부정선거였다. 응답자 10명 중 1명 <296명, 10.20%>
- 조국 대표 부부에 대한 검찰수사-정당했다 <동의 61.22%, 부동의 35.61%>
 - 실행선고 조국 대표 불구속은 잘못이었다 <동의 50.74%, 부동의 46.09%>
-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정당했다 <동의 55.39% 부동의 41.23%>
 - 북한의 도발행동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동의 68.25%, 부동의 31.30%>
- 다수당인 야당이 단독 입법강행 하는 것 - 바람직하지 않다 <67.05%>
 - 정부가 예산을 많이 지원하면 결혼·출산이 늘 것이다 <동의 22.37%, 부동의 77.46%>
- 우리 법원(사법)은 불공정한 편이다 <19.34%, ‘매우 불공정하다’ 4.14%>
 - 유권(전)무죄, 무권(전)유죄 현상은 여전하다고 본다 <81.80%>
- 10억을 준다면 1년 동안 교도소 생활할 수 있다 <45.36%, 2020년에는 44.62%>
 -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법을 지키지 않을<범죄할> 수 있다 <52.60%>
- 귀하의 정치적 성향은 보수적(‘다소’ 포함) <40.16%> vs. 진보적(‘다소’ 포함) <49.95%>
 - 선거에서 내 한표는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동의 79.35%>
-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 <동의 30.06%, 부동의 69.46%>
 - 주한미군 철수하면 우리국방 걱정된다 81.39% <걱정 안됨 17.99%>
- “자유” 를 삭제하는 개헌만큼은 막아야 한다 <90.14%, 2020년에는 82.60%>
 - 출산이 저조한 이유는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때문이다 <부동의 67.08%>

1. 입법/사법감시, 법률전문단체인 34년 전통의 법률소비자연맹/대학생법정치봉사단(총재 김대안)은 매년 법의 날(4.25)과 유권자의 날(5.10)을 기해 청년·대학생 법정치의식을 조사해왔으며, 금년

도는 4·10 제22대 국회 총선 이후 법률소비자연맹의 대학생자원봉사자 275명을 통해 전국의 200여개(홍콩시태대, 런던대 등 해외대학교 포함) 대학교 청년·대학생 및 대학원생 등 **2,901명**을 대상으로(응답자의 **평균연령 23.24세**)으로 실시한 **46개 항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pm 1.82\%P$ 〉

2. 주요항목별 응답현황 <<자세한 내용은 5쪽, 이하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가. 법 준수 의지 및 사법의 공정성 관련

- 01) 유권무죄, 무권유죄 현상 여전하다 <<동의 81.80%, 부동의 16.79%>>
- 03) 국가·사회의 법준수 여부는 '지켜지고 있다' <<67.08%(매우포함), 안지켜짐 32.06%(매우포함)>>
- 04) 악법이라도 법개정 전까지는 지켜야 한다 <<동의 64.91%, 부동의 34.57% >>**
- 05)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법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 <<동의 52.60%, 부동의 46.81%>>
- 06) 우리나라는 법을 지키면 오히려 잘 살기 어렵다 <<동의 41.92%, 부동의 57.53%>>
- 07) 10억을 준다면, 1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할 수 있다 <<동의 45.36%, 부동의 54.36%>>**
- 08) 우리 법원(사법부)은 불공정한 편이다 23.48% (매우포함)
 << '공정한 편이다' 32.37% (매우포함), '보통이다' 43.33%>>

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현재진행형 수사·재판 관련

- 01)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정당했다 <<동의 55.39% 부동의 41.23%>>**
- 02) 검찰의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 선거법기소는 정당했다 <<예 57.67%, 아니오 38.47%>>
- 03) 검찰의 조국 전 서울대 교수부부 수사는 정당했다 <<예 61.22%, 아니오 35.61%>>**
- 04) 항소심 실형 조국 대표를 불구속한 것은 잘못이었다 <<예 50.74%, 아니오 46.09%>>
- 05)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혹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 <<예 77.25%, 아니오 19.89%>>

다. 통일·안보 관련

- 01)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 <<동의 30.06%, 부동의 69.46%>>
- 02) 헌법개정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헌법개정(개헌)은 안된다 <<동의 90.14%, 부동의 9.48%>>**
- 03)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국방은 걱정이 없을 것이다 <<동의 17.99%, 부동의 81.39%>>
- 04) 북한의 도발행동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동의 68.25%, 부동의 31.30%>>**
- 05) 북한의 잦은 미사일 발사에 안보위협 느낀다 <<동의 62.91%, 부동의 36.64%>>
- 06) 북한 핵에 맞서서 핵무기를 보유(개발)해야 <<찬성 48.05%, 반대 51.36%>>**

라. 출범하는 제22대 국회에 기대하는 바

- 01) 제22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
 일자리 창출 입법(37.64%), 정치개혁입법(29.33%), 복지강화입법(17.34%) 등 순
- 02) 다수당인 야당이 단독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67.95%(매우포함),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도 16.72%, 바람직하다 28.27% (매우포함)>>**
- 03) 허위 구인광고 피해 <<직접 받은 경험 10.20%, 본 적 있다 30.51%>> **대책 필요**
- 04) 노동조합의 불법에 대한 책임면제 <<바람직하지 않다, 70.28%, 바람직 26.51%>>

마. 총선 공약 관련

- 01) 개헌시 헌법에 광주 5·18을 넣어선 안된다 <<동의 24.20%, 부동의 74.59%>>**
- 02)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 <<동의 31.40%, 부동의 67.32%>>**
- 03)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해야 한다 <<동의 82.49%, 부동의 16.68%>>**
- 04) 전국민 민생지원금 25만원 지원해야 한다 <<동의 37.75%, 부동의 61.36%>>**
- 05)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 <<동의 52.19%, 부동의 46.40%>>**

06) 경기남도와 경기북도로 나뉘야 한다 <<동의 30.44%, 부동의 68.46%>>

바. 4.10 총선 및 총선결과에 대한 인식

01) 지난 4.10 총선은 부정선거였다.<<동의 10.20%, 부동의 64.15%, 모르겠다 25.47%>>

02) 특히, 사전투표는 부정선거였다.<<사전투표에 대한 응답자 396명 중 동의 56.31%, 부동의 21.21%, 모르겠다 22.47%>>

03)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소선거구제는 바꿔야 한다 (응답자의 45.02%)

소선거구제는 한국상황에 맞는 제도로 승자독식이라고 볼 수 없다(응답자의 48.98%)

04)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66.36%),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역량부족'(7.41%)

사. 정치, 선거에 대한 인식

01) 정치에 대한 관심 <<관심 54.05%(매우 9.86% 포함), 무관심 45.44%(전혀 7.45%포함)>>

02) 정치에 대한 성향 <<보수적인 편 40.16%(다소 포함), 진보적인 편 49.95%(다소 포함)>>

03) 선거에서 후보 최종선택 <<투표소에서(25.47%), 선거 3일전(24.44%) 등 순으로>>

04) 선거에서 내 한 표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동의 79.35%, 부동의 20.27%>>

05) 선거를 통해 국가전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동의 86.56%, 부동의 13.13%>>

06) 선거로 나의 일상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동의 75.84%, 부동의 23.78%>>

07) 후보선택의 기준<<정책·공약(36.44%), 소속정당(30.51%), 인물(19.96%) 순으로>>

08) 공약이행수준 기대치<<30~50%(54.88%), 0~20%(25.41%), 60~80%(15.82%)순으로>>

아.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

01) 결혼은 해야 한다 <<동의 42.47%, 부동의 57.19%>>

02) 자녀는 낳아야 한다 <<동의 34.78%, 부동의 65.01%>>

03) 결혼을 위해서는 경제적 독립이 필수다 <<동의 77.97%, 부동의 21.61%>>

04) 정부가 결혼·출산장려에 예산만 많이 지원하면 결혼과 출산이 늘 것이다
<<동의 22.37%, 부동의 77.46%>>

05) 출산이 저조한 이유는 여성의 사회활동이 많아 졌기 때문이다
<<동의 32.71%, 부동의 67.08%>>

3. 이번 조사를 주관한 김대인 법률연맹 총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결단이자 우리 헌법의 근본원리로서 국가(정부)의 존재이유”라고 자유의 의미를 강조하고, “법과 정치의 목적은 평화와 번영, 즉 국리민복(國利民福)이며,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생명이다. 민주주의를 향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준법을 생활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유민주적 헌법이념과 실질적 법치가 실현되도록 주권시민들이 부정선거감시 등 주인노릇에 충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붙임 - 주요 항목별 분석(5쪽) 및 설문별 응답현황 (22쪽)

이하 상세한 설문은 법률소비자연맹 홈페이지(www.goodlaw.org) 공지사항 참조 끝.

법률연맹 총본부 / 한국대학생(법정치)봉사단

전화. 02) 523-8760~7, goodlaw@goodlaw.org <문의 : 홍 금 애 실장 / 윤 소 라 부장>

I. 조사배경 · 개요 |

1. 입법/사법감시, 법률전문단체인 34년 전통의 **법률소비자연맹/한국대학생법정치봉사단**(총재 **김대인**)은 매년 **법의 날(4.25)**과 **유권자의 날(5.10)**를 기해 대학생 법정치 의식조사를 해왔으며, 2024년도에는 4.10 총선 이후 법률연맹의 대학생법정치봉사단원 **275명이 대학교 대학(원)생 총 2,901명을 대상(평균연령 23.24세)**으로 2023년 4월 29일(월)부터 5월 10일(금)까지 12일 동안 46개 문항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 개요

- 1) 조사기관 : 법률소비자연맹/한국대학생(법정치)봉사단 (총재 김대인)
- 2) 조사방법 : 46개 문항의 설문으로 자원봉사대학생들(275명)에 의한 조사
- 3) 조사대상 : 남녀 청년 · 대학(원)생 **2,901명**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pm 1.82\%$ P〉

가) 성별 응답자 현황

구 분	응답인원(명)	응답비율(%)
남 자	1213	41.81%
여 자	1650	56.88%
무응답	38	1.31%
계	2901	100%

나) 학력별 응답자 현황

구 분	응답인원(명)	응답비율(%)
재 학	1957	67.46%
휴 학	396	13.65%
졸 업	384	13.24%
대학원 재학	70	2.41%
기타	23	0.79%
무응답	71	2.45%
계	2,901	100%

다) 응답자 **평균연령 : 23.24세**

Ⅱ. 주요 응답 분석 |

1. 법 준수 관련 의식

- 1) 유권무죄, 무권유죄 현상과 관련하여 “우리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유권무죄 무권유죄’(有權無罪 無權有罪 : 권력이 있으면 죄가 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죄를 뒤집어쓴다)라는 말에 대해 동의하십니까?”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이 지난해에는 78.90%로, 조사한 이후 처음으로 70%대로 낮아졌으나, 2024년 올해 또 다시 81.80%로 높아졌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6.79%였다. (2023년도 78.90%, 2022년도 86.69% 2021년도 86.91%, 2020년도 85.26%로 높게 나온 바 있음)

« '유권무죄 무권유죄 현상'에 대한 인식 »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유권무죄무권유죄현상이 있다는데 동의한다.	2373	81.80%
☐ 2. 유권무죄무권유죄현상이 있다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487	16.79%
☐ 3. 기타	28	0.97%
☐ 0. 무응답	13	0.45%

- 2) 우리 사회의 법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대체로 지켜지고 있다’는 의견이 59.94%(2023년도 59.91%)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는 의견이 7.14%(2023년도 7.22%)로 나와 시민들의 법 준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체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은 26.99%(2023년도 27%), ‘매우 안 지켜지고 있다’는 의견은 5.07%(2023년도 5.07%)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선량한 시민은 잘 지키지만, 기득권층은 지키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 국가·사회의 법 준수 여부 »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	207	7.14%
☐ 2. 대체로 지켜지고 있다.	1739	59.94%
☐ 3. 대체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783	26.99%
☐ 4. 매우 안 지켜지고 있다.	147	5.07%
☐ 5. 기타/무응답	25	0.86%

3) 악법은 안 지켜도 된다는 풍조와 관련해 ‘악법이라도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지켜야 한다’에 동의하는 의견이 64.91%(2023년도 62.73%)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 35.57%(2023년도 37.15%)보다 높게 나와서 악법이라도 개정 전까지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2021년에는 ‘악법이라도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지켜야 한다’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이 66.35%(2020년도 66.92%)인 반면, 부동의하는 응답은 33.58%(2020년도 32.67%)였다.

« ‘악법이라도 법개정 전까지는 지켜야한다’동의 여부 »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동의한다)	1883	64.91%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1003	34.57%
☐ 3. 무응답	15	0.52%

4) 처벌여부에 따른 법 준수 태도와 관련,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법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에 동의하는 의견이 52.60%(2023년도 49.20%),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46.81%(2023년도 50.68%)로 지난해와 찬반이 바뀌었다. 처벌여부가 법 준수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참고로 2021년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법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에 동의하는 의견은 51.94%(2020년도 48.87%)였고, 부동의 하는 의견은 47.70% (2020년도 50.96%)였다.

«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법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에 대한 동의여부 »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동의한다)	1526	52.60%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1358	46.81%
☐ 3. 무응답	17	0.59%

5) 법 준수에 대한 피해의식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법을 지키면 오히려 잘 살기 어렵다’에 동의하는 의견은 41.92%(2023년도 44.01%)였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57.53%(2023년도 55.70%)였다. 참고로 2021년에는 ‘우리 사회에서는 오히려 법을 지키면 잘 살기 어렵다’에 동의하는 의견은 48.13%(2020년도 46.35%)였고, 부동의를 51.65%(2020년도 50.99%)였다.

« ‘법을 지키면 오히려 잘 살기 어렵다’에 대한 동의여부 »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동의한다)	1216	41.92%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1669	57.53%
☐ 3. 무응답	16	0.55%

- 6) ‘10억을 준다면 1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할 수 있다’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은 45.36%(2023년도 49.32%, 2022년도 47.84%)가 나와, 지난해보다 낮아졌고 ‘부동의한다’는 54.36%(2023년도 50.51%)였다.

참고로 2021년에는 ‘10억을 준다면 1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는 응답은 48.72%(2020년도 44.62%)였고, 부동의한다는 응답은 50.91%(2020년도 55.11%)였다.

« ‘10억주면 1년 동안 교도소 생활’에의 동의여부 »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동의한다)	1316	45.36%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1577	54.36%
☐ 3. 무응답	8	0.28%

- 7) 우리나라 법원(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공정한 편이다’는 의견은 28.47%(2023년 29.62%, 2022년 34.91%), ‘매우 공정하다’는 의견은 3.90%(2023년 5.59%, 2022년 4.94%)로 나타났다. 근소한 차이지만 지난해 보다 긍정적인 의견이 줄었다. 반면 ‘불공정한 편이다’는 의견은 19.34%(2023년 16.58%, 2022년 18.33%), ‘매우 불공정하다’는 의견은 4.14%(2023년 4.28%, 2022년 2.72%)로, 지난해 보다 부정적 의견이 다소 늘었다. 전체적으로 10명중에 2명 이상은 사법부(법원)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 ‘법원(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매우 공정하다.	113	3.90%
☐ 2. 공정한 편이다.	826	28.47%
☐ 3. 보통이다.	1257	43.33%
☐ 4. 불공정한 편이다.	561	19.34%
☐ 5. 매우 불공정하다.	120	4.14%
☐ 6. 기타	15	0.52%
☐ 0. 무응답	9	0.31%

- 8) ‘흠수저라도 노력하면 남들처럼 잘 살 수 있다’에 대해 56.64%(2023년도 50.88%)는 동의하였지만, 44.71%(2023년도 48.7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 ‘흠수저라도 노력하면 남들처럼 잘 살 수 있다’에 대해 동의여부 »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 (동의한다)	1585	54.64%
☐ 2. 아니오 (동의하지 않는다)	1297	44.71%
☐ 0. 무응답	19	0.65%

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현재 진행형 수사와 재판 관련

- 1)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정당했다’에 동의하는 의견은 55.39%, 1607명(2023년 67.96%, 1652명 응답)이 답변한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41.23%. 1196명(2023년 29.29%, 712명)이었다.

« ‘이재명 대표 수사는 정당했다’에 대한 동의여부 »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동의한다)	1607	55.39%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1196	41.23%
☐ 3. 무응답	98	3.38%

- 2) ‘검찰이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의 선거법 위반 기소는 정당했다’에 동의하는 의견은 57.67%(1673명)이었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38.47%(1116명)이었다.

« ‘이재명 대표 부인 선거법 기소는 정당했다’에 대한 동의여부 »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동의한다)	1673	57.67%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1116	38.47%
☐ 3. 무응답	112	3.86%

- 3) ‘조국 전 서울대 교수 부부에 대한 수사는 정당했다’에 동의하는 의견은 61.22%(1776명)이었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35.61%(1033명)이었으며, 무응답이 3.17%였다.

« ‘조국 전 서울대 교수 부부에 대한 수사는 정당했다’에 대한 동의여부 »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동의한다)	1776	61.22%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1033	35.61%
☐ 3. 무응답	92	3.17%

- 4) ‘항소심에서 실형선고를 받은 조국 전 서울대교수를 구속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었다’에 동의하는 의견은 50.74%(1472명)로 대체로 구속하지 않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46.09%(1,337명)로 나와 의견의 엇갈림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 '실형선고 받은 조국 전 교수의 불구속은 잘못이었다'에 대한 동의여부 »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동의한다)	1472	50.74%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1337	46.09%
☐ 3. 무응답	92	3.17%

- 5)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혹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에 동의하는 의견은 77.25%(2241명)인 반면, 동의하지 않는 의견은 19.89%(577명)에 불과해 특검 추진 의견이 많았다.

«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혹 특검실시'에 대한 동의여부 »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동의한다)	2241	77.25%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577	19.89%
☐ 3. 무응답	83	2.86%

3. 통일 · 안보 관련 의식

- 1) 헌법개정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헌법개정은 안 된다'는 의견이 90.14%(2023년도 91.57%, 2022년도 92.30%)로 여전히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였고, 삭제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은 9.48%(2023년도 8.35%, 2022년도 7.49%)에 불과하였다.

2021년도에도 '자유를 삭제하는 헌법개정(개헌)은 해서는 안 된다'에 동의하는 의견이 90.40%(1237명)으로 '부동의한다'는 의견(9.51%)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즉, 4년 연속 90%대를 유지하고 있다.

« '자유' 삭제 헌법 개정에 대한 동의여부 »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동의한다)	2615	90.14%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275	9.48%
☐ 3. 무응답	11	0.38%

- 2) '남북통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의견이 30.06%(872명)였고,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69.46%(2015명)로 부동의의견이 10명중 7명 꼴로 나와, 청년 대학생들의 경우 남북통일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 '남북한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에 대한 의견 >>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 (동의한다)	872	30.06%
☐ 2. 아니오(부동의한다)	2015	69.46%
☐ 0. 무응답	14	0.48%

- 3)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우리 국방은 걱정이 없을 것이다'에 동의하는 의견은 17.99%(2023년도 19.29%, 2022년도 21.05%)이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81.39%(2023년도 80.17%, 2022년도 78.69%)로 매우 높게 나와, 청년 대학생들은 주한미군의 주둔이 여전히 우리 안보와 직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는 '주한미군 철수해도 우리 국방은 걱정이 없을 것이다'에 동의하는 의견은 19.09%(2020년도 24.77%)인 반면, 부동의하는 의견이 80.69%(2020년도 74.77%)로 높았다.

<<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우리 국방에 걱정이 없다'에 대한 동의여부 >>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동의한다)	522	17.99%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2361	81.39%
☐ 3. 무응답	18	0.62%

- 4) '북한의 도발행동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에 동의하는 의견은 68.25%(2023년도 71.99%)로 높게 나왔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31.30%(2023년도 27.81%)로 청년 대학생들은 강력한 대북정책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대한 동의여부 >>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동의한다)	1980	68.25%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908	31.30%
☐ 3. 무응답	13	0.45%

- 5) '북한의 잦은 미사일 발사에 안보위협을 느낀다'에 동의하는 의견은 62.91%(2023년도 59.28%, 2022년도 58.31%)로 높게 나왔다. 그러나 36.64%(2023년도 40.39%)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위협'에 대한 동의여부 >>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 (동의한다)	1825	62.91%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1063	36.64%
☐ 3. 무응답	13	0.45%

- 6) '북한 핵에 맞서서 핵무기를 보유(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의견이 48.05%(2023년도 49.20%)였고,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51.36%(2023년도 47.92%)였다. 북한의 잦은 미사일 시험에 위협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핵무기 보유 내지 개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평가됐다.

<< '북한 핵에 맞선 핵 개발(보유)'에 대한 의견 >>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 (찬성한다한다)	1394	48.05%
☐ 2. 아니오(반대한다)	1490	51.36%
☐ 0. 무응답	17	0.59%

4. 새로 출범하는 제22대 국회에 대한 기대

- 1) '개헌시 헌법 전문에 광주 5·18을 넣어서는 안된다'에 대해서 동의하는 의견은 24.20%(702명),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74.59%(2164명)으로 많이 나왔다. 대체적으로 5·18을 헌법전문에 넣는 것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아직 청년 대학생들조차 5·18을 헌법에 넣는 것에 우려하는 입장도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개헌시 헌법전문에 광주 5·18을 넣어서는 안된다'에 대한 의견 >>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 (찬성한다한다)	702	24.20%
☐ 2. 아니오(반대한다)	2164	74.59%
☐ 0. 무응답	35	1.21%

- 2) '제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입법과제'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입법'이 37.64%(1092명)으로 가장 많이 나왔고, '정치개혁을 위한 입법'이 29.33%(851명)으로 그 다음이었다. '복지강화를 위한 입법'은 17.34%(503명)이었고, 그 다음으로 '공정선거를 위한 입법'이 6.15%였다. 반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입법'은 2.55%에 불과했다.

기타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저출산 대책 입법’과 ‘국회의원 특권 폐지 입법’, ‘지방자치 부작용 정비 입법’, ‘한일관계 및 독도영유권에 관한 입법’, ‘부동산문제 해결입법’등이 많이 나왔다.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 ‘현안 특검을 위한 입법’ 그리고 ‘동물권 강화 입법’ ‘국군장교 권익향상 입법’ ‘성폭력,데이트 폭력방지 입법’ 등도 나왔다.

« ‘제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입법과제’에 대한 의견 »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입법	1092	37.64%
☐ 2. 공정선거를 위한 입법	178	6.14%
☐ 3. 정치개혁을 위한 입법	851	29.33%
☐ 4.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입법	74	2.55%
☐ 5. 복지 강화를 위한 입법	503	17.34%
☐ 6. 기타의견	162	5.58%
☐ 0. 무응답	41	1.41%

3) 제22대 국회도 여소야대 국회가 될 것인데, ‘다수당인 야당이 단독 입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50.33%(지난해 같은 취지 설문 에 대해 51.91%)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16.72%(지난해 20.65%)로 나타나, 법안처리가 가능한 ‘다수당’이라고 하더라도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

반면, ‘매우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4.52%(지난해 4.28%),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23.75%(지난해 18.35%)에 불과했다. 기타 의견으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조치”, “ 다수당이 단독입법하는 듯한 현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함을 떠나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이라는 답변도 있었다.

« 다수당의 ‘단독 법안 처리’에 대한 의견 »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매우 바람직하다.	131	4.52%
☐ 2. 바람직하다.	689	23.75%
☐ 3. 바람직하지 않다.	1460	50.33%
☐ 4.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485	16.72%
☐ 5. 기타	88	3.03%
☐ 0. 무응답	48	1.65%

4) 입법과제의 하나로서, 허위구인광고와 관련해 ‘아르바이트나 직장을 구할 때 허위구인광고로 피해를 받은 적이 있거나, 친구나 아는 사람 중에서 피해를 받는 것을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본인이 직접 피해를 받은 적이 있다’

는 답변이 10.20%(296명)이나 나왔으며,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은 것을 본 적이 있다’는 답변이 30.51%(885명)으로 나와, 허위 구인광고 문제가 실제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허위 구인광고 피해’에 대한 의견 >>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본인이 직접 피해를 받은 적이 있다.	296	10.20%
☐ 2. 다른사람이 피해를 받은 것을 본 적이 있다.	885	30.51%
☐ 3. 직접받은 적도, 주변에서 본 적도 없다.	1694	58.39%
☐ 4. 기타 의견	11	0.38%
☐ 0. 무응답	15	0.52%

- 5) 입법과제와 관련해, ‘노동조합의 합법적 파업뿐만 아니라 불법적 파업에 대해서도 민형사책임을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48.43%(1405명)으로 많았고,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21.85%(634명)나 나왔다.

반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20.41%(592명)이었고, ‘매우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6.10%(177명)이었다. 기타 의견으로 ‘불법과 합법을 누가 정하나’는 반문과, ‘어떤 형태의 불법적 파업인가에 따라 다를 것 같다’는 판단 유보 입장도 있다.

<< ‘노동조합의 불법적 파업에 대한 책임면제’에 대한 의견 >>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매우 바람직하다.	177	6.10%
☐ 2. 바람직하다.	592	20.41%
☐ 3. 바람직하지 않다.	1405	48.43%
☐ 4.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634	21.85%
☐ 5. 기타의견	54	1.86%
☐ 0. 무응답	39	1.34%

5.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의식

- 1)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결혼은 해야 한다’에 ‘동의한다’는 입장은 42.47%(2023년도 40.64%)로 10명 중에 4명에 불과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57.19%(2023년도 59.07%)로 많았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 중 여성 응답자는 68.58%(2023년도 70.42%)로, 남성응답자의 41.85%(2023년도 44.08%)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 '결혼은 해야 한다'에 대한 동의여부 >>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 (동의한다)	1232	42.47%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1659	57.19%
☐ 0. 무응답	10	0.34%

응답항목	남학생(1209명)	여학생(1646명)
☐ 1. 예(동의한다)	703 (58.15%)	517 (31.41%)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506 (41.85%)	1129(68.59%)

2) '자녀는 낳아야 한다'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은 34.78%(2023년도 28.47%)로 10명 중에 3명에 불과했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65.01%(2023년도 71.25%)로 나타나 대한민국 소멸론, 인구절벽의 문제가 상당기간 지속되거나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자아냈다.

여성 응답자의 경우 무려 **77.87%(2023년도 82.26%)**가 출산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답변하였고, 남성의 경우에는 **47.60%(2023년도 56.84%)**가 '자녀는 낳아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 '자녀는 낳아야 한다'에 대한 동의여부 >>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 (동의한다)	1009	34.78%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1886	65.01%
☐ 0. 무응답	6	0.21%

응답항목	남학생(1210명)	여학생(1649명)
☐ 1. 예(동의한다)	634(52.40%)	365(22.13%)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576(47.60%)	1284(77.87%)

3) '결혼을 위해서는 경제적 독립이 필수다'는 것에 대해서는 77.97%(2023년도 81.74%)가 동의한다고 하여, 경제적 독립이 결혼의 선결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의하는 의견은 21.61%(2023년도 17.98%)에 불과했다. 여성과 남성 모두 '경제적 독립이 필수'라는 데 동의하는 경우가 남성 78.81%, 여성 78.07%로 80%대에 육박했다.

<< '결혼을 위해서는 경제적 독립이 필수다'에 대한 동의여부 >>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 (동의한다)	2262	77.97%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627	21.61%
☐ 0. 무응답	12	0.41%

응답항목	남학생(1208명)	여학생(1646명)
☐ 1. 예(동의한다)	952(78.81%)	1285(78.07%)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256(21.19%)	361(21.93%)

4) ‘정부가 예산만 많이 지원하면 결혼과 출산이 늘 것이다’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은 22.37%(2023년도 32.50%)로 나타나,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결혼 및 출산을 저조현상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동의하는 의견이 77.46%(2023년도 67.26%)였다.

여자응답자의 경우 80.96%(2023년도 70.78%)로 남자응답자의 72.83%(2023년도 62.79%)보다 부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정부가 예산만 많이 지원하면 결혼과 출산은 늘 것이다’에 동의여부 »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 (동의한다)	649	22.37%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2247	77.46%
☐ 0. 무응답	5	0.17%

응답항목	남학생(1211명)	여학생(1649명)
☐ 1. 예(동의한다)	329(27.17%)	314(19.04%)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882(72.83%)	1335(80.96%)

5) ‘출산이 저조한 이유는 여성의 사회활동이 많아 졌기 때문이다’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은 32.71%(949명)으로 부동의하는 의견 67.08%(1946명)보다 적게 나왔지만, 여성의 사회활동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여성의 사회활동과 육아환경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나타냈다.

이 응답은 여성이나 남성이나 비슷했다. 여성의 경우에는 30.75%가 동의하였고, 남성의 경우에는 35.81%가 동의하였다.

« ‘출산저조는 여성의 사회활동이 많아졌기 때문’에 대한 동의여부 »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 (동의한다)	949	32.71%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1946	67.08%
☐ 0. 무응답	6	0.21%

응답항목	남학생 (1209명)	여학생 (1649명)
☐ 1. 예(동의한다)	433(35.81%)	507(30.75%)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776(64.19%)	1142(69.32%)

6. 제22대 총선 및 공약 관련

- 1) '지난 4·10 총선은 부정선거였다'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이 10.20%(296명) 나왔고, '모르겠다'는 응답도 25.47%(739명)이었다. '부정선거가 아니었다'고 한 의견은 64.15%(1861명)이었다.

« '4·10총선은 부정선거였다'에 대한 동의여부 »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부정선거였다)	296	10.20%
☐ 2. 아니오(부정선거가 아니었다)	1861	64.15%
☐ 3. 모르겠다.	739	25.47%
☐ 0. 무응답	5	0.17%

- 2)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전선거와 관련해서 응답한 사람(396명)중 과반이 훨씬 넘는 223명(56.31%)이 '사전선거는 부정선거였다'에 '예'라고 응답했다. '아니오'라고 부동의한 의견은 84명(21.21%)에 불과했다.

« '특히, 사전선거는 부정선거였다'에 대한 동의여부 »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사전투표는 부정선거였다)	223	56.31%
☐ 2. 아니오(사전투표는 부정선거가 아니었다)	84	21.21%
☐ 3. 모르겠다.	89	22.47%

- 3) 254개 선거구에서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힘 득표율차는 5.4%포인트에 불과한데 국회의원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이 161석, 국민의힘이 90석으로 71석 차이가 난 현상과 관련,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에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렸다.

즉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소선거구제는 바뀌야 한다'는 응답이 45.02%(1306명)였고, '소선거구제는 한국 상황에 맞는 제도로 승자독식의 결과라고 볼 수 없다'는 응답이 48.98%(1421명)이었다.

기타 의견도 많이 나왔는데, 대표적인 의견으로는 '수도권 지역에 편중된 선거구의 숫자를 줄일 필요가 있다(선거구의 크기는 인구수가 아닌 넓이에 비례해야 한다)', '소선거구제가 승자독식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로서는 한국의 현실에 맞는 최선의 대안이라 생각한다', '당장 선거제를 바꿨으면 하는 의견까지는 아니지만, 적은 표차를 반영하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제도라 생각한다', '소선거구제는 지역주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줄이기 위해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되 그것이 지역주의를 부추긴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소선거구제가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존재하지만, 이것보다 더 나은 대안이 없는 것 같다', '비례대표는 남용이 너무 심하고 결선투표제는 다당제가 유명무실해질 것 같고, 선호투표제는 비용시간 측면에서 너무 비효율적일 것 같다', '당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뽑는 투표자의 인식 개선이 근본적 해결책이다' 등의 의견이 있었고, '모르겠다'는 응답도 많이 나왔다. 질문 자체에 대해 '질문이 부정적인 답을 유도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소선거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동의여부 ▶▶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소선거구제를 바꿔야 한다.	1306	45.02%
☐ 2. 소선거구제는 한국 상황에 맞는 제도로 승자독식 결과라고 볼 수 없다.	1421	48.98%
☐ 3. 기타의견	123	4.24%
☐ 0. 무응답	51	1.76%

4)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이 66.36%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의 선거전략 부족'이 11.82%로 그다음이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의 역량부족'은 7.41%였다.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해소 부족'은 10.58%였다.

기타 의견으로 '뽑을 인물이 없었다', '김건희 여사 의혹 해소 부족 및 국민의힘 선거 전략 부족' 등 복수 답변(4개 모두라는 의견도), '민주당의 여론전 및 조국혁신당 돌풍' 과 '의료계 혼란 초래 및 기존 지지층이었던 의사 집단의 반발' 그리고 '이준석 탈당' 등도 원인으로 뽑았다.

◀◀'국민의힘이 참패한 가장 중요한 원인'에 대한 의견 ▶▶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의 역량부족	215	7.41%
☐ 2.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	1925	66.36%
☐ 3. 김건희 여사 의혹관련 해소부족	307	10.58%
☐ 4. 국민의힘의 선거전략 부족	343	11.82%
☐ 5. 기타의견	65	2.24%
☐ 0. 무응답	46	1.59%

5) 이번 총선 중 나온 주요 공약들과 관련해서

5-1)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옮겨야 한다'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은 31.40%였고, 부동의하는 의견은 67.32%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동의여부 >>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 (동의한다)	911	31.40%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1953	67.32%
☐ 0. 무응답	37	1.28%

5-2) ‘국민이 국회의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은 82.49%로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고, 부동의하는 의견은 16.68%에 불과했다.

<<‘국회의원 소환제’에 대한 동의여부 >>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 (동의한다)	2393	82.49%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484	16.68%
☐ 0. 무응답	24	0.83%

5-3)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전 국민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에 대해서는 37.75%가 동의하는 반면, 61.36%가 부동의하였다.

<<‘전국민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에 대한 동의여부 >>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 (동의한다)	1095	37.75%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1780	61.36%
☐ 0. 무응답	26	0.90%

5-4)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직선제 도입’에 대해서는 52.19%가 동의하는 입장이었다. 반면, 46.40%는 부동의하였다.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직선제 도입’에 대한 동의여부 >>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 (동의한다)	1514	52.19%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1346	46.40%
☐ 0. 무응답	41	1.41%

5-5) ‘경기도를 경기남도와 경기북도로 나눠야 한다’는 공약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응답은 30.44%였고, 부동의하는 응답은 68.46%로 2배 정도 반대의견이 많았다.

<<‘경기도 분도’에 대한 동의여부 >>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 (동의한다)	883	30.44%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1986	68.46%
☐ 0. 무응답	32	1.10%

7. 정치, 선거 및 유권자 선택과 관련

- 1) '정치에 대한 관심도'에 관한 설문에서 '매우 관심이 많다'는 의견은 9.86%,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은 44.19%로, 과반 이상인 54.05%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별로 관심이 없다'는 응답은 37.99%, '전혀 관심이 없다'는 의견도 7.45%였다. 기타 의견으로 '정치에 관심을 두어 봐야 변하는 게 없다'는 회의적인 의견도 있었다.

<<'정치에 대한 관심도'에 대한 의견 >>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매우 관심이 많다.	286	9.86%
☐ 2.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1282	44.19%
☐ 3. 별로 관심이 없다.	1102	37.99%
☐ 4. 전혀 관심이 없다.	216	7.45%
☐ 5. 기타의견	6	0.21%
☐ 0. 무응답	9	0.31%

- 2) '정치적 성향이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에서 '보수'쪽 응답이 40.16%, '진보'쪽 응답이 49.95%였다.

기타 응답으로는 '진보, 보수 둘 다 아니다', '중도(중립)'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응답, '나의 이득에 따라 취사선택한다', '성향이 드러날 만큼 관심 있는 편이 아니다', '노동, 복지, 청년, 교육정책에 관하여는 진보적, 안보와 경제 정책에 관하여는 보수적', '복지는 진보, 경제는 보수'라는 응답, '정해 두지 않음'이라는 응답, '비밀이다'라는 응답 등도 있었다.

<<'정치 이념적 성향'에 대한 의견 >>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보수적	230	7.93%
☐ 2. 다소 보수적	935	32.23%
☐ 3. 다소 진보적	1162	40.06%
☐ 4. 진보적	287	9.89%
☐ 5. 기타의견	229	7.89%
☐ 0. 무응답	58	2.00%

- 3)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를 언제 최종 선택했는지'에 대해 '투표소에서' 선택을 했다는 응답이 25.47%로 가장 많았다. 기타 의견으로는 '선거 당일'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선거 3일전'이 24.44%, '선거일주일 전'이 24.06%이었고, '선거 2주일 이전'은 20.61%였다. 대부분 선거 직전에 자신이 뽑을 후보자를 선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 의외로 이번 선거에 '투표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무효표'를 행사했다는 응답도 있었고, '선거 1년 전 이미 선택했다'는 등 소위 콘크리트 지지층도 있었다.

« '후보자 선택 시기'에 대한 의견 »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투표소에서	739	25.47%
☐ 2. 선거3일 전	709	24.44%
☐ 3. 선거 일주일 전	698	24.06%
☐ 4. 선거 2주일 이전	598	20.61%
☐ 5. 기타 의견	132	4.55%
☐ 0. 무응답	25	0.86%

4) 선거 내지 투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서는

4-1) '선거에서 내 한표는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이 79.35%, 부동의하는 입장이 20.27%로 다수가 자신의 선택이 선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내 한표는 선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에 대한 동의여부 »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 (동의한다)	2302	79.35%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588	20.27%
☐ 0. 무응답	11	0.38%

4-2) '선거를 통해 국가전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86.56%가 동의한다는 입장이었고, 부동의하는 입장은 13.13%에 불과했다.

« '선거를 통해 국가전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에 대한 동의여부 »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 (동의한다)	2511	86.56%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381	13.13%
☐ 0. 무응답	9	0.31%

4-3) '선거를 통해 나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75.84%가 동의하는 입장이었고, 23.78%는 부동의하는 입장이었다.

« '선거로 나의 일상 생활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에 대한 동의여부 »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 (동의한다)	2200	75.84%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690	23.78%
☐ 0. 무응답	11	0.38%

5) '후보자 선택의 기준'과 관련해서는 '정책·공약'이라는 응답이 36.44%로 가장 많이 나왔으며, 후보자의 소속정당이라는 응답이 30.51%였다.

반면 후보자 개인의 인물·능력·도덕성 등에 대해서는 19.96%였고, 이외에 후보자 개인의 출신지역은 1.41%, 정치경력이 4.10%, 개인적 연고, 학연·지연 등은 0.93%에 불과했다.

<< '후보자 선택의 기준'에 대한 의견 >>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정책·공약	1057	36.44%
☐ 2. 소속 정당	885	30.51%
☐ 3. 인물·능력·도덕성	579	19.96%
☐ 4. 출신 지역	41	1.41%
☐ 5. 정치경력	119	4.10%
☐ 6. 개인적 연고, 학연·지연 등	24	0.83%
☐ 7. 주위의 평가	115	3.96%
☐ 8. 기타의견 :	30	1.03%
☐ 0. 무응답	51	1.76%

6) '총선 선거공약의 이행에 대한 기대'에 대한 설문에서 '30~50% 정도 이행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54.88%로 가장 많이 나왔다. '0~20%'로 비교적 저조한 이행을 보일 것이라는 응답이 25.41%, '60~80%' 정도의 이행을 보일 것이라는 입장은 15.82%, '80% 이상'의 이행을 보일 것이라는 응답은 2.69%에 불과했다.

<< '총선 선거공약의 이행정도에 대한 기대'에 대한 의견 >>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0~20%	737	25.41%
☐ 2. 30~50%	1592	54.88%
☐ 3. 60~80%	459	15.82%
☐ 4. 80% 이상	78	2.69%
☐ 5. 기타의견	16	0.55%
☐ 0. 무응답	19	0.65%

Ⅲ. 항목별 응답 현황 I

01. 부정선거는 국가패망의 독재·부패국가를 합법화시키는 반민주국가의 길이다.
귀하는 다음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지난 4.10 총선은 부정선거였다.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동의한다)	296	10.20%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1861	64.15%
☐ 3. 모르겠다.	739	25.47%
☐ 0. 무응답	5	0.17%

2) <1 번 질문에 부정선거였다고 답변한 경우에만 답변하세요>

특히 사전투표는 공정했다.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동의한다)	223	56.31%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84	21.21%
☐ 3. 모르겠다.	89	22.47%

02.귀하는 254개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득표율차는 5.4%포인트에 불과한데 국회의원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이 161석, 국민의힘이 90석으로 71석차이가 났습니다.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에 기인한 것인 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소선거구제를 바꿔야 한다.	1306	45.02%
☐ 2. 소선거구제는 한국 상황에 맞는 제도로 승자독식 결과라고 볼 수 없다.	1421	48.98%
☐ 3. 기타의견	123	4.24%
☐ 0. 무응답	51	1.76%

03. 귀하는 우리 국가·사회가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	207	7.14%
☐ 2. 대체로 지켜지고 있다.	1739	59.94%
☐ 3. 대체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783	26.99%
☐ 4. 매우 잘 안지켜지고 있다.	147	5.07%
☐ 5. 기타의견	19	0.65%
☐ 0. 무응답	6	0.21%

04. 귀하는 우리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유권무죄 무권유죄'(有權無罪 無權有罪 : 권력이 있으면 죄가 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죄를 뒤집어 쓴다)라는 말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동의한다	2373	81.80%
☐ 2. 동의하지 않는다	487	16.79%
☐ 3. 기타의견 :	28	0.97%
☐ 0. 무응답	13	0.45%

05. 귀하는 정부의 대북정책 관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동의하시면 예, 동의하지 않으면, 아니오에 응답바람.)

1) 북한의 도발행동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해야 한다.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동의한다)	1980	68.25%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908	31.30%
☐ 3. 무응답	13	0.45%

2) 북한의 잦은 미사일 발사에 안보위험을 느낀다.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동의한다)	1825	62.91%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1063	36.64%
☐ 3. 무응답	13	0.45%

3)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우리 국방은 걱정없을 것이다.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동의한다)	522	17.99%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2361	81.39%
☐ 3. 무응답	18	0.62%

4) 북한 핵에 맞서서 핵무기를 보유(개발)해야 한다.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동의한다)	1394	48.05%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1490	51.36%
☐ 3. 무응답	17	0.59%

5) 남북한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동의한다)	872	30.06%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2015	69.46%
☐ 3. 무응답	14	0.48%

06. 귀하는 다음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동의하시면 예, 동의하지 않으면, 아니오에 응답바람.)

1) '자유'를 삭제하는 헌법개정(개헌)을 해서는 안된다.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동의한다)	2615	90.14%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275	9.48%
☐ 3. 무응답	11	0.38%

2) 개헌시 헌법 전문에 광주 5·18을 넣어서는 안된다.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동의한다)	702	24.20%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2164	74.59%
☐ 3. 무응답	35	1.21%

3) 악법이라도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지켜야 한다.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동의한다)	1883	64.91%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1003	34.57%
☐ 3. 무응답	15	0.52%

4)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법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동의한다)	1526	52.60%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1358	46.81%
☐ 3. 무응답	17	0.59%

5) 우리나라는 법을 지키면 오히려 잘 살기 어렵다.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동의한다)	1216	41.92%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1669	57.53%
☐ 3. 무응답	16	0.55%

6) 10억을 준다면, 1년동안 교도소생활을 할 수 있다.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동의한다)	1316	45.36%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1577	54.36%
☐ 3. 무응답	8	0.28%

7) 흡수저라도 노력하면, 남들처럼 잘 살 수 있다.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동의한다)	1585	54.64%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1297	44.71%
☐ 3. 무응답	19	0.65%

07. 귀하는 법원(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매우 공정하다.	113	3.90%
☐ 2. 공정한 편이다.	826	28.47%
☐ 3. 보통이다.	1257	43.33%
☐ 4. 불공정한 편이다.	561	19.34%
☐ 5. 매우 불공정하다.	120	4.14%
☐ 6. 기타의견	15	0.52%
☐ 0. 무응답	9	0.31%

08. 귀하는 다음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예, 동의하지 않으면, 아니오에 응답바람.)

1) 검찰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수사는 정당했다.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동의한다)	1607	55.39%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1196	41.23%
☐ 3. 무응답	98	3.38%

2) 검찰의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의 선거법 위반 기소는 정당했다.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동의한다)	1673	57.67%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1116	38.47%
☐ 3. 무응답	112	3.86%

3) 검찰의 조국 전 서울대 교수 부부에 대한 수사는 정당했다.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동의한다)	1776	61.22%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1033	35.61%
☐ 3. 무응답	92	3.17%

4) 법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선고를 받은 조국 전 서울대 교수를 구속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었다.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동의한다)	1472	50.74%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1337	46.09%
☐ 3. 무응답	92	3.17%

5) 대통령부인 김건희 여사의 의혹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동의한다)	2241	77.25%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577	19.89%
☐ 3. 무응답	83	2.86%

09. 귀하는 새로운 제22대 국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입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입법	1092	37.64%
☐ 2. 공정선거를 위한 입법	178	6.14%
☐ 3. 정치개혁을 위한 입법	851	29.33%
☐ 4.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입법	74	2.55%
☐ 5. 복지 강화를 위한 입법	503	17.34%
☐ 6. 기타의견	162	5.58%
☐ 0. 무응답	41	1.41%

10. 귀하는 새로 구성될 제22대 국회에서(21대 처럼) 다수당이 단독 입법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매우 바람직하다.	131	4.52%
☐ 2. 바람직하다.	689	23.75%
☐ 3. 바람직하지 않다.	1460	50.33%
☐ 4.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485	16.72%
☐ 5. 기타의견	88	3.03%
☐ 0. 무응답	48	1.65%

11. 귀하는 이번 총선 중 나온 공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예, 동의하지 않으면, 아니오에 응답바람.)

1)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옮겨야 한다.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동의한다)	911	31.40%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1953	67.32%
☐ 3. 무응답	37	1.28%

2) 국민이 국회의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동의한다)	2393	82.49%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484	16.68%
☐ 3. 무응답	24	0.83%

3) 전 국민에게 민생지원금 2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동의한다)	1095	37.75%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1780	61.36%
☐ 3. 무응답	26	0.90%

4)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의 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동의한다)	1514	52.19%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1346	46.40%
☐ 3. 무응답	41	1.41%

5) 경기도를 경기남도와 경기북도로 나눠야 한다.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동의한다)	883	30.44%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1986	68.46%
☐ 3. 무응답	32	1.10%

12. 귀하는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의 역량부족	215	7.41%
☐ 2.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	1925	66.36%
☐ 3. 김건희 여사 의혹관련 해소부족	307	10.58%
☐ 4. 국민의힘의 선거전략부족	343	11.82%
☐ 5. 기타의견	65	2.24%
☐ 0. 무응답	46	1.59%

13. 귀하는 아르바이트나 직장을 구할 때 허위구인광고로 피해를 받은 적이 있거나, 친구나 아는 분 중에서 받은 사람을 본 적이 있었습니까?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본인이 직접 피해를 받은 적이 있다.	296	10.20%
☐ 2. 다른사람이 피해를 받은 것을 본적이 있다.	885	30.51%
☐ 3. 직접 받은 적도, 주변에서도 본적도 없다.	1694	58.39%
☐ 4. 기타의견	11	0.38%
☐ 0. 무응답	15	0.52%

14. 귀하는 “노동조합의 합법적 파업 뿐만 아니라 불법적 파업에 대해서도 민형사 책임을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매우 바람직하다.	177	6.10%
☐ 2. 바람직하다.	592	20.41%
☐ 3. 바람직하지 않다.	1405	48.43%
☐ 4.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634	21.85%
☐ 5. 기타의견	54	1.86%
☐ 0. 무응답	39	1.34%

15. 귀하는 정치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매우 관심이 많다.	286	9.86%
☐ 2. 어느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1282	44.19%
☐ 3. 별로 관심이 없다.	1102	37.99%
☐ 4. 전혀 관심이 없다.	216	7.45%
☐ 5. 기타의견	6	0.21%
☐ 0. 무응답	9	0.31%

16. 귀하는 귀하의 정치적 성향이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보수적	230	7.93%
☐ 2. 다소 보수적	935	32.23%
☐ 3. 다소 진보적	1162	40.06%
☐ 4. 진보적	287	9.89%
☐ 5. 기타의견	229	7.89%
☐ 0. 무응답	58	2.00%

17. 귀하는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를 언제 최종 선택하셨습니까?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투표소에서	739	25.47%
☐ 2. 선거 3일전	709	24.44%
☐ 3. 선거 일주일전	698	24.06%
☐ 4. 선거 2주일 이전	598	20.61%
☐ 5. 기타의견	132	4.55%
☐ 0. 무응답	25	0.86%

18. 귀하는 다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예, 동의하지 않으면, 아니오에 응답바람.)

1) 선거에서 내 한 표는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동의한다)	2302	79.35%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588	20.27%
☐ 3. 무응답	11	0.38%

2) 선거를 통해 국가 전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동의한다)	2511	86.56%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381	13.13%
☐ 3. 무응답	9	0.31%

3) 선거를 통해 나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동의한다)	2200	75.84%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690	23.78%
☐ 3. 무응답	11	0.38%

19. 귀하는 투표할 때 주로 후보자의 어떤 점을 가장 많이 고려하여 투표하셨습니까?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정책·공약	1057	36.44%
☐ 2. 소속 정당	885	30.51%
☐ 3. 인물·능력·도덕성	579	19.96%
☐ 4. 출신 지역	41	1.41%
☐ 5. 정치경력	119	4.10%
☐ 6. 개인적 연고, 학연·지연 등	24	0.83%
☐ 7. 주위의 평가	115	3.96%
☐ 8. 기타의견	30	1.03%
☐ 0. 무응답	51	1.76%

20. 귀하는 4.10 총선거의 선거공약이 어느정도 이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0~20%	737	25.41%
☐ 2. 30~50%	1592	54.88%
☐ 3. 60~80%	459	15.82%
☐ 4. 80%이상	78	2.69%
☐ 5. 기타의견	16	0.55%
☐ 0. 무응답	19	0.65%

21. 귀하는 다음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예, 동의하지 않으면, 아니오에 응답바람.)

1) 결혼은 해야 한다.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동의한다)	1232	42.47%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1659	57.19%
☐ 3. 무응답	10	0.34%

2) 자녀는 낳아야 한다.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동의한다)	1009	34.78%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1886	65.01%
☐ 3. 무응답	6	0.21%

3) 결혼을 위해서는 경제적 독립이 필수다.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동의한다)	2262	77.97%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627	21.61%
☐ 3. 무응답	12	0.41%

4) 정부가 예산만 많이 지원하면 결혼과 출산이 늘 것이다.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동의한다)	649	22.37%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2247	77.46%
☐ 3. 무응답	5	0.17%

5) 출산이 저조한 이유는 여성의 사회활동이 많아진 때문이다.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예(동의한다)	949	32.71%
☐ 2. 아니오(동의하지 않는다)	1946	67.08%
☐ 3. 무응답	6	0.21%